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재개약

중단하라



2019년 기자개
퍼는 노동운동,
쟁점과 과제

6~7면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영구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12면

3월 국회의
노동개악 맞서
투쟁

2, 3, 4면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과 남성 노동자가
단결해 성차별과
노동개악에 맞서자

11면

세계 혁명의 등대
코민테른 창립
100주년

10면

20대 남녀
계속 이간질하는
문재인 정부

8면

5.18 망언 규제 논란
국가에 혐오 표현
규제를 요구해야 하나?

9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파업권 제한, 국민연금 개악 ...

경사노위는 노동 개악 강요 기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3월 7일 2차 본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 등 최근 산하위원회를 통과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의 한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연장근로 수당 등 임금 손실도 크다. 시급 1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연간 임금이 평균 78만 원 깎일 것으로 전망된다(양대노총). 최저임금을 ‘쫓다 뺏기’ 하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하자마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무력화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지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혹은 협의만 하면 무시할 수 있게 해 놨다. 중소기업업·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해 놔지만, 구체 내용과 기준이 불분명해 사용자가 대충만 들어도 된다. 설사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 이 역시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로사 방지법’도 이런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안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법률 제정을 권고할지 기존 산안법 개정



1월 28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열린 집회. 문재인 대통령의 거둬들인 배신과 좌파의 효과적 선동 덕분에 이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부결됐다

을 권고할지도 못 정한 상태인데, 법률 제정을 권고하더라도 노동시간 등 구체적 내용은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로사 방지’라는 용어도 제외하기로 해 실제 내용은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그나마 최근 합의가 불발돼 7일 회의에는 상정될 가능성이 낮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는 사용자들의 요구인 단체협상과 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그 내용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와 과태료·배상 명령제도 신설, 유니온숍

조항 삭제·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파업 찬반투표 유효기간 60일 설정 등 개선은커녕 말도 안 되는 개악안들이다.

사용자들은 공익위원안 발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용자 측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개선을 발표 하겠다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근로빈곤대책(고용안전망),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그러나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한 이 합의문은 반년이 지나도록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합의 이전에

발표한 정책 외에 나아진 게 거의 없고,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2월 8일에 열린 국민연금 특위에서는 연금 개악의 ‘원칙’이 합의됐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 나간다.”

앞부분은 ‘보험료 인상 없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없다’는 뜻이고, 뒷부분은 심지어 연금 인상분보다 보험료 인상분이 더 커야 한다는 뜻이다. 노인빈곤 해결보다 ‘재정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고약한 논리가 작동한 결과다.

회의 결과를 보면, 특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 연금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매우 소극적으로 문제제기했을 뿐 이런 원칙에 동의한 듯하다. 정부는 4개 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중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훨씬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안으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는 셈이다.

경사노위가 노동 개악 강요를 위한 기구라는 사실이 매우 명확해졌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했다면 이런 야합에 무기력하게 당하거나, 중도 탈퇴했어야 했을 텐데 이는 노동자들이 개악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떨어뜨렸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 파업을 조직해 이런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장호중

Q 용어설명

유니온숍

일단 고용된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노동조합 가입 제도, 노동조합의 단결력 유지·강화를 위해 단체협약으로 체결한다.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최근 학부모들의 가슴을 쏙이게 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 한유총을 규탄하는 여론은 매우 컸다. 최근 교육부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유총이 반대한 ‘유치원 3법’,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80퍼센트를 넘었다.

분노한 학부모들의 항의도 잇따랐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학부모 200여 명이 거리 시위를 했다. 곳곳에서 유치원에 항의 방문을 하거나 항의 전화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 결과 애초 휴업에 동참하겠다고 했던 유치원들도 휴업을 철회하거나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등으로 후퇴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집권 중반에 우파의 압력에 밀려 사립학교법 개악에 합의한 것은 정권의 위기를 낳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번에는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본 듯하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이번 휴업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데는 사립 유치원에 타협적인 정부 정책이 있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2017년 9월 한유총의 휴업 사태 때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현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나서서 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을 후퇴시키는 방향의 중재를 했었다.

더 근본에서는 역대 정부들이 유아교육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한 문제가 있다. 지난 몇 년간 국공립 유치원이

늘기는 했지만, 전체 유치원생(2018년 기준 67만 5998명) 중 국공립 유치원생의 비율은 25.5퍼센트로 OECD 꼴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사립 유치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가 폭로된 이후에도 개혁의 속도는 매우 더디다.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연말 국회 입법은 좌초했다. 이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입법이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의 타협 때문에 비리에 대한 처벌 수준은 크게 후퇴한 상황이다.

국공립 유치원도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올해 총 1072학급 증설해 국공립 유치원생을 2만 1440명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이 다 실행되더라도 전체 유치원생의 3.1퍼센트

만이 추가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

한유총은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면 사유재산이 “몰수”되는 것이고, “사회주의 교육”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추진하려는 정책은 사회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저 매우 미흡한 개혁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유아 교육이 개선되려면, 이를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공립 유치원이 전적으로 담당해 무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유아 교육을 정부가 책임질 때에야 개별 가정에 맡겨진 (날이 갈수록 커지는)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소련·북한처럼 국가자본주의로 왜곡된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아의

사회화”를 주장해 왔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아직 패배하기 전인 혁명 직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조치로서 공공 탁아소가 대규모 설치됐다. 아동 복지는 물론이고, 여성들의 자유가 크게 늘었다.

이번에는 한유총이 패배했지만, 이번 사태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 속에 우파들의 기가 살아나면서 작은 개혁조차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벌이는 우익적 시도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유치원3법’ 문제는 3월 국회에서부터 쟁점이 될 수 있다.

노동계급의 투쟁이 강화돼 계급 세력관계를 전진시키는 것에 이들에 맞서는 진정한 힘이 있을 것이다.

유아 교육에서도 사립 중심 구조가 유지된다면 이번과 같은 사립 유치원의 횡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유치원 개혁 입법과 함께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선영

노동개악의 문을 열 3월 국회

노동운동, 지금은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

김문성

3월 4일 여야 정당들이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임시국회 개원에 동의했다.

주류 양당은 애초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들을 통과시키고 쟁점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 비리 의혹 의원들의 국정 조사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개회가 지연돼 왔다.

한국당으로서도 기업주들이 청탁한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는 없었을 것이다. 최근 5·18 망언으로 역풍을 맞고 유치원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잠시 소홀했지만, 한국당이 쇠퇴한 게 아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부터 회복세(상승세)에 있다.

한국당은 2년 전 박근혜 퇴진으로 정권을 잃은 후, 우파 지지층에 의존하며 문재인 개혁 배신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려 왔다. 경기 침체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우경화하면서 지지층이 실망해 빠져나갈 것이 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골화된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로 그 전략은 나름 먹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지지율을 회복할수록 중도파의 확장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딜레마가 있다. 촛불 투쟁의 효과로 사회 전반에 반우파 정서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다수파는 우파성을 완화해서는, 즉 선명성을 조절해서는 중도층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촛불 효과를 상쇄시켜야 한다는 뜻이고, 투쟁으로 이전의 세력균형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이 한국당 새 대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는 “좌파 독재 저지 투쟁”으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공천 권한을 행사하는 요직에 친박 우파들이 다시 자리잡았다.

이는 3월 국회에서 우파적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 우파에게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유리한 전후를 외면할 리 없다.

트럼프가 말한 “영변 외 핵시설”의 존재를 가지고 대북 압박과 대여 공세를 벌일 것이다. 진보 염원 배신에 실망한 노동자와 청년들에게는 어처구니없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생색내기 개혁 연사조차 비난 대상이 될 것이다.

중도와 우파의 투쟁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응은 어떨까? 여권은 자본가 정당답게 노동개악을 주도함으로써 우파의

주도권을 봉쇄하려 한다. 기업주 여론이 한국당에게 일방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안(한정에 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악안(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을 내놓고, 한국당에 “민생”을 위해 국회 개원에 합의하라고 압박해 왔다. 개악 합의에 한국노총을 끌어들였고, 이런 이간질로 민주노총의 투쟁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한다.

그러나 일부 쟁점에서는 한국당을 상대로 강경하게 전투를 벌이기도 한다. 5·18 망언 제명 요구도 그런 경우였다. 지배계급이 노동개악 말고는 분열해 있기도 하고, 정부가 지금 밀렸다가는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간 공식 정치의 핵심 대결 쟁점은 2차 북미회담(결렬)과 유치원 개학 연기 문제였다.

삼일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신속한 중재(북·미 간)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유치원 사용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법적 해산).

한유총

한유총이 하루 만에 개혁 연기를 철회해 정부가 일단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이 싸움은(빠르면 3월 국회에서 쟁점이 될) 에듀파인(국가 회계 관리 전산 프로그램) 도입을 포함한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이었을 뿐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 문재인도 노무현이 집권 중반기 4대 개혁 실패 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에 대연정을 제안하다가 지지층이 붕괴해 버린 경험에서 나름 배운 듯하다.

그러나 이런 여야 투쟁이 정부가 진보 지향 개혁을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은 삼일절 기념사로 친일 청산, 색깔론 청산을 호기롭게 말했지만,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 설치를 막고,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사면을 거부했다.

경제 침체 장기화로 인한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지배계급이 분열해 있는 것은 노동자들이 싸우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반면 중도파와 우파의 투쟁이 공식 정치를 계속 지배하면, 사회 전체의 진정한 쟁점인 계급 문제가 희석될 수 있다. 노동운동이 우파에 반대하면서도 계급투쟁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2년 전 우파 정부를 쫓아내는 데에 앞장섰던 노동운동이 이 과정을 비판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



문재인의 우경화가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악화시키는데, 우파를 저지한다고 문재인 비판을 삼가면, 오히려 우파가 혜택을 입는다

경사노위는 처음부터 경사진 운동장

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노동계에 주는 것처럼 포장했던 경사노위도 문재인 정부의 다른 개혁 기만과 유사하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의 국제적 경험에서도, 1998년 이후 한국의 노사정 협의체 경험에서도 경제 침체가 “사회적 대화”는 노동개악으로 가는 통로 구실을 했다.(심지어 복지와 노동조건이 실제로 개선되던 1950년대 유럽에서도 노사정 대화는 노동자들에게 임금 억제와 생산성 향상 협조를 요구했다.)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도 여러 차례 법적 위상과 이름이 바뀌어 왔지만, 노동자의 양보를 압박하고 정당화하는 기구라는 본질은 변한 적이 없다.

이런 목적 때문에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영입된 문성현(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않고 중간에 뛰쳐나갈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 처음부터 강조했다.

경사노위 스스로 경제 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유연안정성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유연안정성은 쉬운 해고와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국가 지원(복지와 재취업 교육)을 뜻한다. 필요한 것은 “조정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 삭감), 노

조법 개악, 국민연금 개악 등이 모두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하면 되는 ILO 기본 협약(핵심은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을 굳이 경사노위에 비준 관련 법률 정비를 맡긴 것의 의도가 뻔하다. 노조가 혜택을 받는 만큼 사용자 측에 양보하라는 것이다. 경사노위 논의를 통해 이를 자연스러운 논의로 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다.

노동 유연화

결국 사용자들은 단결권 보장의 반대급부로 그 단결권을 무용지물로 만들 단체행동권 무력화 방안을 내놔다. 경사노위는 이를 철충하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를 쪼으니 입 다물어달라는 식이다.

이것이 기본권 도입마저 노사 협상 대상으로 만들어 누더기로 만드는 경사노위식 마법이다.

이런 개악안이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경사노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도 논의는 3월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당 등은 재차 개악을 시도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첫해의 노사정위 안건으로 내놓았던 비정규직 개악안이 그런 과정을 거

쳐 국회를 통과했었다.

정부는 민주노총에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에 들어와야 하고, 민주노총까지 합의한 안이라면 국회에서 더 개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유혹”해 왔다. 경사노위에서 개악이 이뤄진 책임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개악을 추진하면서 그게 ‘날 말리지 못한 네 탓’이라는 것이다.

기업주들이 양보할 의사와 여지가 별로 없는 경제 위기 시대에 (특히 더) 국가적 노사정 대화 기구가 노사 간에 중립적일 순 없다.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뿐이다. 예외가 있다면, 노동자들이 거대한 대중 투쟁을 성공적으로 벌여 그 요구를 두고 협상이 벌어질 때뿐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경사노위의 본질적인 목적과 구조를 폭로하며, 작업장과 거리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표현하는 일이다. 그 길만이 더 넓은 노동계급의 진보개혁 염원에 부응하는 길이다. 지배계급이 서로 다투고 분열해 있는 지금은 싸우기에도 불리하지 않다.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와 일부 산별 지도자들이 대의원대회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두들기기를 하며 투쟁을 건설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3월 7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2월 27일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반영한 개악안(대표발의 신창현)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결정구조 이원화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에 반복돼 온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상폭을 둘러싼 논쟁은 매년 최저임금조차 동결해야 한다는 사용자들의 억지 때문이었지 결정구조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위원회가 ‘절충’구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억제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들의 필요보다 협소한 자본주의 사회·경제 이론의 기초 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장률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진대거나 경제성장률과 비례해야 한다는 기업주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 하에서 기업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차등 적용 같은 개악이 더해질 가능성도 크다. 이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관련 개악안을 20개 가까이 내놓

은 상황이다.

정부·여당도 결코 믿을 수 없다. 정부는 기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염두에 두고 ‘기업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하려 했었다. 이것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체됐지만, 이 또한 업종·규모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차등 적용의 근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거듭되는 개악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15퍼센트로, 이들 중 압도 다수가 미조직·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때문에 최저임금을 두고 이들의 생명줄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의 거듭되는 최저임금 개악은 이 생명줄을 썩은 동아줄로만 들어왔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월 174만 5150원이다(10.4퍼센트 인상). 그래서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받던 노동자들은 지난해보다 17만 1380원을 더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지난해보다 10만 원 정도밖에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올해 초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이 기본급은 동결한 채, 급식비와 교통비 중 6만 7840원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삭감법’이 통과된 뒤, 연봉 25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하청업체인 태



1년 전인 2018년 5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집회

호코퍼레이션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의 올해 1월 월급은 215만 1067원으로 지난해보다 고작 1만 7050원 올랐다. 사측이 기본급을 동결하고 각종 수당을 올려 최저임금에 맞추면서, 성과금은 10만 원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홉플러스의 경우, 사측이 상여금과 수당을 산입해 기본급을 올해 인상률의 절반인 5퍼센트만 인상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이를 막아냈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구조 개악으로 인상률마저 묶이면, 저임금 개선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는 더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하위 20퍼센트 가구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7.7퍼센트나 줄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개선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다.

여기에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체행동권 제약 —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 까지 추가되면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족쇄에 묶인 채로 저항에 나서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노동개악은 사용자들이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더 쉽게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미조직·저소득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체 노동계급의 삶이 더욱 나락으로 내몰릴 것이다. 민주노총이 투쟁에 전력으로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장우성

태안화력에서 또!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김용균 씨와 동일한 협착 사고였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한전산업개발 소속 하청 노동자였다. 그는 3월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려다가 움직이는 설비에 몸이 끼였다. 천만다행히도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비상 정지 장치를 당겨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나마 김용균 씨 사망 후 2인 1조 근무가 시행된 덕분이다.

이번 사고는 김용균 씨 참사와 정부 대책 발표 후에도 발전소 현장이 여전히 “살인 병기”(고 김용균 씨 어머니)임을 보여 준다. 발전소 수익 창출을 우선한 나머지 위험한 작업 현장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지부 최규철 태안화력지회장은 “[발전소 현장에서는] 설비가 우선이지, 사람 우선이 아니다” 하고 일갈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도 근무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인데다 설비가 다가오는 걸 보고 몸을 피했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몸이 끼였다.

노동자들은 김용균 씨 사고 직후부터 9~10호기(김용균 씨 사고 장소)만이 아니라 1~8호기도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 진단과 설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부발전 사측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위험이 있다면 가동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되풀이했다.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생길 수익 감소 때문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정부와 서부발전 측에 있다.

한전산업개발지부 이태성 사무국장

은 “같이 다니면서 사고가 나면 비상 정지 장치를 당겨 가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꼭꼭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청업체 사측은 사고 발생 보고서에서 “운전원 판단 오류”, “안전 불감” 때문에 사고가 벌어졌으며 노동자의 부주의로 책임을 떠넘긴다. 김용균 씨 사망 후에도 하청업체의 행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산재 은폐 행위도 벌어졌다. 하청업체 사측은 구급차를 불러 노동자를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기는커녕, 회사 대기실로 이동시킨 후 보고서 작성을 위해 1시간 40분 동안 해당 노동자의 다친 부위를 촬영하며 노동자를 방치했다고 한다. 사고 당한 노동자를 찾던 동료들이 이를 발견하고 항의한 후에야, 하청업체 사측은 구급차가 아니라 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동안 하청업체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피하려고 사고를 감추고 축소하

기에 급급했다. 원청인 서부발전도 2017년 국회에 인명사고 발생 건수를 축소 보고했다.

이번 사고는 발전소가 여전히 위험한 일터이며, ‘위험의 외주화’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서 매우 미온적이거나 굵뜨며, 심지어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여당이 우파 야당과 손잡고 통과시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이라고 잘못 불리고 있다. 발전소 등에서 위험 작업의 외주화가 금지되지 않았고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처벌의 하한형 도입은 또 다시 무산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기업살인법’)은 아예 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

문재인은 2월 18일 김용균 씨의 부모님을 만나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실천은 기업 (이윤) 활동 지원 강화에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외주화 중단은커녕, 올해 공공부문에 민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

화에도 적극적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 위탁은 직영화 여부를 개별 기관 자율로 맡겨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했다.(관련 기사 4면) 김용균 씨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는 한사코 거절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들은 새로운 공공기관 자회사를 만들어 전환하기로 했고, 민간위탁으로 분류한 경상 정비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에 걸맞는 조처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산재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월에만 대전 한화 무기 공장(로켓 폭발)과 당진의 엔아이스틸공장(철재에 끼임), 현대제철 공장(컨베이어벨트에 끼임) 등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영화하라. 노동자 살인 기업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신정환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2월 27일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목에서 보여 주듯, 정규직 전환은커녕 민간위탁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 등 저질 일자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간위탁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용 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국무총리 이낙연)며 사실상 나몰라라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1단계에서 누락되거나 비효율과 서비스 질 저하, 위탁업체 비리 의혹 등 문제가 있는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직영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마저도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직영화(정규직화)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과 다름 없다. 실내 청소와 경비 등은 1단계 전환 대상인데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더니 이제 와서 전환 여부를 개별 기



1월 27일 고 김용균 49제와 제6차 범국민 추모제

관이 판단해 또 다시 제외될 위험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정규직 전환 1·2단계에서도 전환 여부를 자율에 맡겨 정규직 전환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했다. 정부 자신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막대한 예산 증가'를 이유로 전환 대상을 축소하거나 아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빼버렸다.

정부가 '심층 논의가 필요한 위탁사무'(발전자 경상정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상하수도 검침 등)로 분류한 업무들도 '소관 부

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야 정규직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다. 검토 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구조라면 노동자들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매우 부차화될 것이 뻔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 민주노총이 '용역계약서'까지 제출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20만 명(정부 조사)에 이르는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사실

상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책 계승

대부분 공공서비스인 민간위탁 사무는 상시·지속적 업무(92.8퍼센트)다. 그러나 경쟁적 계약 제도 등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에서 보듯, 외주화는 끔찍한 사고를 늘린다. 민간위탁의 목적이 예산 절감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간위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증가해 왔다. 역대 정부들은 모두 공공부문 구조조정(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외주화를 활용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공공부문 선진화', '공공부문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며 민영화와 외주화를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도 전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주들의 이윤 창출을 지원하는 데에 골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3년마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민간위탁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고용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임금 인상을 억누르려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임금 수준'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조차 '가이드라인'일 뿐 구속력이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저지와 함께 공공부문 민간위탁 중단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

신정환

한국오라클노조 안종철 위원장 인터뷰

“기본도 안 된 오라클, 재파업에 나설 것”

지난해 5월 16일, 글로벌 IT 대기업 오라클의 한국 지사 IT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83일간 이어졌다. 오라클 노동자들은 파업 이후 오늘까지 212일째 농성 투쟁을 이어 왔고, 상반기 재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오라클노동조합의 안종철 위원장(사진)**을 만나 인터뷰했다.

재파업 등 투쟁 확대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 5월 16일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투쟁한 지 1년이 돼 갑니다.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1년 안에 해결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지금 경영진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전체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이 드러났습니다. 어제는 지사장이 교체돼 회사가 지금 출렁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변화 조짐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근로 감독 과정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11월 23일부터 노동부 현장 근로감독이 들어왔고, 기간을 세 번 연장해 2월까지 이어졌어요. [그 결과] 근로감독관은 국내법이 규정하는 근로계약서 자체가 [오라클에] 존재하고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라클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나왔어요. 미사용 연차는 100퍼센트 보상을 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은 50퍼센트만 보상하고, 일정 지급 이상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것이 적발됐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에 서명을 요구한 부서도 있어요. 근로감독관도 매우 놀란 내용입니다.

더 큰 건은 체불된 초과수당인데, 3년치가 100억 원 이상이 될 걸로 추정돼요.

조합원들은 회사가 법조차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분노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 외국계 IT 회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곳은 오라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난 파업으로 글로벌 대기업의 IT 노동자들조차 초장시간 노동에 놓여 있다는 게 잘 드러났습니다. 장시간 노동 문제 등 파업 이후 달라진 게 있나요?

조합원들이 이제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파업 이전엔 월요일 출근해서 금요일 퇴근하면서 100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최소한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야근이나 당직 근무를 주로 서는 직종의 노동자들은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아예 거부하기도 해요. 그런 지시는 사측도 조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투쟁 성과의 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의 파업 이후에 다른 IT기업에서 노조 조직화가 늘고 있어요. 저희가 파업할 때 전단지들 들고 판고, 구로, 상암 같은 데 가서 나눠 줬어요. 판교 쪽 신생 IT 노조들인 네이버, 카카오, 넥슨 조합 간부들에게 들어 보면, 그때 우리가 나눠 준 전단지를 다 받았고 자세히 읽어 봤다고 해요.

최근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개악이 IT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거라고 보십니까?

직격탄이라고 봅니다. IT 노동자들은 몰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산실 작업은 주로 야간이나 주말, 휴일, 연휴에 몰리거든요. 기간으로는 연말, 월말에 몰립니다.

예컨대 전산실 중요 작업은 주로 주말에 해요. 주말에 일 시키고 싶을 때, 월요일부터 수요일엔 나오지 말고 주말에 내내 일하라고 하면 노동시간 평균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월말 작업이 몰릴 때, 첫 주는 그냥 쉬고 월말에 몰아서 일을 시키면, 평균을 맞출 수 있어요. 분기 마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여유를 갖고 일할 준비를 하거나 업무지식을 습득할 시간을 아예 노동시간에서 빼버릴 수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중소 사업장은 일은 일대로 하고 수당은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파업 때 임금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고 지금도 핵심 요구중 하나인 것으로 압니다.

10년 이상 급여가 동결됐습니다. 0퍼센트 인상이었어요. 물가인상률만 따져도 10년이면 30퍼센트 정도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성과연봉제를 하면서 공정한 평가가 없는 것이 지난해 총파업의 원동력이었어요. 사측이 아무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인사 평가, 승진, 급여 인상 등을 개별적으로 해 왔어요. 인사평가가 줄서기 같은 것을 통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에 분노가 가장 컸습니다.

설문으로 확인해 보면, 성과급을 100퍼센트를 가져가는 노동자들은 전체의 20퍼센트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목표를 과도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 수준만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노조 인정도 중요한 요구인데요.

[미국 본사는] 이 파업이 다른 해외 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신경 쓰고 있어요. 본사가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노조가 없지만 유럽 지사 노조는 한국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또, 지난해 파업 때 태국·싱가포르·필리핀 등 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은 아시아 국가 해외 지사에서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쟁 계획은 어떤가요?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행동일자는 공개하지 않지만, 행동은 분명히 할 겁니다.

오라클 노조는 제일 앞에서 행동했고, 처음 시작했고, 지금도 가장 앞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으니, 가장 먼저 정취할 것입니다.

오라클 노조는 IT 노동자가 외국 자본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모든 IT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공익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 전문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인터뷰 이정원, 정리 안형우

2019년 기지가 펴는 노동운동 — 쟁점과 과제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 운영위원

문재인 2년, 개선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처지

문재인 정부는 고용 증가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했다. 그러나 정부의 요란한 구호는 속 빈 강정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집권 2년 동안 노동자들의 소득도, 고용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노동대중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1분위(하위 20퍼센트) 가구의 근로소득은 무려 22.6퍼센트나 감소했다. 정부는 1분위에 비취업자들이 많아서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2분위 가구도 3.2퍼센트 감소했고, 3분위와 4분위 가구의 근로소득도 거의 정체했다(각각 고작 2.1퍼센트와 2.6퍼센트 증가).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1.3퍼센트 증가했다. 그간의 추세를 보면 5분위 내에서도 상위 1퍼센트의 근로소득만이 대폭 증가했을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분배 지표 수치가 악화된 것을 보고 밤잠을 못 자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바닥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내놓은 최저임금 공약을 1년 전에 내던질 때 이것을 예상 못했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도 ‘갸다 뻗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고용률은 더 악화됐다. 문재인이 취임한 2017년 고용률은 60.8퍼센트였는데, 2019년 1월 고용률은 59.2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실업률은 2017년 3.8퍼센트에서 2019년 1월 4.5퍼센트까지 올랐다.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 10퍼센트인데, 1997~1998년 경제 공황 이후 최고치다. 청년 실업률 아니라 40~50대 실업률도 증가했다. 이것은 경기후퇴와 함께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팬잡은 일자리에서 쫓겨난 결과다.



친기업 반노동 공세로 직진하는 문재인 정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혁 후퇴를 반성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갸다 뻗기’는 한 번으로 부족하다는 듯이, 3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제약하려는 것이다.

임금과 함께 노동조건의 양대 축인 노동시간 문제에서도 ‘갸다 뻗기’를 거듭하고 있다. 주52시간 상한제의 각종 유예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하려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 이미 합의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면서도 빈부격차를 증대시킨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에서도 이 점이 선명히 드러난다.

(1)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규제 완화. 샌드박스는 모래가 채워져 있는 나무 박스로, 어린이들이 부모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다. 규제샌드박스 는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없이 맘껏 돈벌이를 하도록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환경이나 안전 등의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안전성 규제 없

이 원칙으로 기기가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것은 ‘모든 정부 규제를 단두대에 올리라’던 박근혜의 정신을 사실상 실천하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의 명분으로 흔히 미배산일 육성이 제시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는 박근혜의 “창조경제”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2) **대우조선 민영화**에다, 대우조선은 현재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국영(공)기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이후에만 13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에 투입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할양으로 매각하려 한다. 대우조선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주주 실적도 좋아졌는데 말이다. 이런 회복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며 쥐어준 결과이다.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려 주려고 일시 공기업화했다가 민간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조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감원과 임금 삭감 등 각종 희생이 강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영구 공기업화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이전 정부들의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3) 다시 **개내 든 노동시장 개혁**.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꼽는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

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은 노동시장의 “정적”된 임금구조를 개혁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등은 모두 임금 **억제와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들에서 직무급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직무급제(표준임금 모델)를 적용해 저임금 고착화를 추진했다. 정부는 이를 “차별”이 아닌 “차등 처우”라고 합리화하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을 뜻하는데, “저정임금”이라는 명분으로 반값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 이윤 보장을 위한 것일 뿐이다.

(4) **단체행동 등 노동조합 운동의 제약**.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 존중”의 핵심은 노동기본권 실현이지만, 지난 2년 동안 전혀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IL.O 협심협약 대준을 하겠다면서도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의 요구는 정가파업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정의행위 찬반투표 유효기간 설정, 부당노동행위 행사 처벌 조항 삭제 등으로, 노동기본권을 대폭 제약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3월 초 경사노위에서 노동기본권 개악이 합의될 우려도 크다.

기지가 펴는 노동자 투쟁

이처럼 친기업 반노동 공세가 노골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태세는 어떻게?

지난해 노동자 투쟁은 회복 탄력성을 보여 줬다.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처음에 주도해 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 덕분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처음에 주도해 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 덕분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처음에 주도해 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 덕분이다.

지난해 많은 노동자들이 항의에 나섰다. 노동자 집회가 무려 3만 2275건이나 있었다. 이것은 그 전해보다 73퍼센트나 증가한 것으로, 매일 88건의 노동자 집회가 열린 것이다. 항의뿐 아니라 파업도 늘었다. 파업 건수는 지난해 123건으로(11월 말 기준), 그 전해보다 91건 늘었다.

노동운동이 오랫동안 활력을 얻고 있다. 노동조합의 성장으로도 확인된다. 노조 조직률은 촛불투쟁 이후 본격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그래프). 민주노총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년 동안 조합원 수가 무려 26만 명이 증가해, 현재 조합원이 100만 명에 육박한다(민주노총 자체 집계). 10년 넘게 정체돼 있다가 오랫동안 성장세를 맞은 것이다.

2018년에는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벌 조항 삭제 등으로, 노동기본권을 대폭 제약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3월 초 경사노위에서 노동기본권 개악이 합의될 우려도 크다.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진적으로 투쟁이 나왔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불법파견 문제로 투쟁에 나섰다.

새로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보건 의료 분야의 을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 등, 금속 분야의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노동자 등, IT 분야의 오라클노조 등등이 그 린 사례다.

반면, 전통적으로 조직이 강력한 부문인 금속과 공공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별로 두드러진 투쟁을 하지 않았다.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컸고 일부는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온건한 노조 지도자들의 양보로 마무리된 곳이 많았다.

이처럼 지난해 노동자 투쟁은 (부분별)로 불균등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됐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반감이 급속히 증대된 하반기 이후 노동자들의 정서가 빠르게 변했다. 투지가 높아진 것이다.

이런 정서는 올해 1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것으로도 잘 드러났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인정했듯이, 대의원대회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 편향적인 정책 행보에 따른 현상의 분노”를 보여 줬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이렇듯 노동자들의 투쟁이 두드러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전환 제외와 자회사 방한 등으로 누더기가 되면서 공공

2019년 노동 쟁점 — 개혁 후퇴 더하기 새로운 공세

올해는 정부·사용자 측과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 한층 증폭될 것이다. 노동자 투쟁이 기지가 펴는 상황과 경제 위기 속 친기업·반노동 공세 강화가 맞물리면서, 올해 노동자 투쟁이 상당한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갈등을 키웠던 쟁점들이 계속될 전망이다. 만만치 않은 갈등을 불러올 새로운 쟁점들이 추가될 것이다.

가령 올해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주목할 만하게 계속될 것이다. 기존 갈등 쟁점(전환 제외와 자회사로의 전환 등)이 지속되는 한편, 새로운 쟁점들이 더해질 것이다. 전환자 처우 개선 문제가 그중 하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것에 불만이 크다. 올해 초 점거 파업을 벌여 승리한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로 예고했던 민간위탁 정규직화에 대해 최근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한 것도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효율성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공공부문] 경영혁신”을 내던지고, 공공부문에서 민간 위탁(외주화)과 신자유주의적 고용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다.

임금 문제도 기존 불만에 새로운 쟁점이 더해지는 양상으로 갈등이 더 첨예하게 벌어질 것이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고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 핵심 문제다. 이를 위한 공세가 계속될 것인데,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기로 한 것도 최저임금 인상 억제가 목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또 다른 임금 억제 정책인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 이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큰 불만을 자아낼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대차 사용자 측은 이미 지난해 직무·성공에 따른 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시간,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문제 등도 불만을 증폭시킬 쟁점들이 추가되면서 올해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불만 증폭

예초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의 개혁 추진(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상한제, 노사관계 안정화, 또한 북한과의 해빙 무드 조성)을 지렛대로 조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 낸다는 구상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정치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급제 도입 등 노동자들의 반감을 살 정책을 일정에 올리게 됐다. 기대를 모았던 개혁 정책들이 큰 실망만 자아낸 채 속도 조절에 들어감과 동시에, 본격적인 노동조건 공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별다른 움직임

을 보이지 않았던 잘 조직된 노동자 부문의 저항을 자극할 수 있다. ‘사전 정치 작업’이 그럭저럭 렀다면 뻔했을 수도 있을 ‘귀족 노조’ 비난의 압박이 떨어지지는 노동자들이 저항에 나설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진보 열의 대중은 개혁 후퇴가 노동자들의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자신의 배신 때문임을 모르지 않는다. 민주노총 ‘국민입심’이 잘 먹히지 않는 이유다. ‘국민’은 실제로는 지배계급과 상층 중간계급을 가리키는 모호한 말이다.

민주노총을 경사노위에 참여시키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무산된 것도 올해 노동관계,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의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통해 개혁 후퇴 또는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반발을 억누르려 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자들도 변형된 형태로나마 ‘사회적 대화’ 참여와 교섭 구조 안정화에 계속 힘쓸 것이다.

그럼에도 적어도 일정 기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원대회가 현상 노동자들의 정서를 보여 준 동시에, 그 결과가 노동자들의 사기를 더욱 높여 줬다는 것이다.

이 있다. 개혁주의적 노조 지도자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조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바람직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심지어 사용자와) 참여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런 약점은 올해 노동운동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온건한 노조 지도자들은 민주노총이 이바지해야 할 한국 사회 개혁 과제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와 일부 겹친다면 이를 위한 ‘광범한’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급을 초월한 국민적 연합은 노동계급의 독자적 투쟁을 어느 수준 이하로 억압하고, 어느 수준을 넘을 듯하면 노동운동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또, ‘정규직 양보를 통한 격차 해소’론이 노동운동 내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것도 약점이다. 노동운동은 온건파뿐 아니라 일부 좌파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방어 노력은 광범한 지지를 받기 어렵고, 노동계급 내 격차만 증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상위그룹인 민주노총”은 노동조건을 지키려는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금 공격,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일자리 연대’, ‘연대임금’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이런 입장은 노동자들의 투지를 떨어뜨리고 수동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 있다. 개혁주의적 노조 지도자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조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바람직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심지어 사용자와) 참여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런 약점은 올해 노동운동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온건한 노조 지도자들은 민주노총이 이바지해야 할 한국 사회 개혁 과제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와 일부 겹친다면 이를 위한 ‘광범한’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급을 초월한 국민적 연합은 노동계급의 독자적 투쟁을 어느 수준 이하로 억압하고, 어느 수준을 넘을 듯하면 노동운동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또, ‘정규직 양보를 통한 격차 해소’론이 노동운동 내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것도 약점이다. 노동운동은 온건파뿐 아니라 일부 좌파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방어 노력은 광범한 지지를 받기 어렵고, 노동계급 내 격차만 증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상위그룹인 민주노총”은 노동조건을 지키려는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금 공격,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일자리 연대’, ‘연대임금’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이런 입장은 노동자들의 투지를 떨어뜨리고 수동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 있다. 개혁주의적 노조 지도자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조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바람직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심지어 사용자와) 참여와 협력을 추진한다.

투쟁적이고도 정치적인 노동운동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 투사들과 좌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 노동운동의 약점을 극복하려면 단지 투쟁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투쟁성도 아직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좌파들은 노동운동이 투쟁적인 동시에 정치적이되도록 애써야 한다. 그래야 노동조합이 사회 개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옳은 발상에서 그릇되게도 문재인 개혁(재벌 개혁, 평화, 복지)에 일면 협력하려는 민중주의 전락이 아닌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단순히 전략 없는 급진 조합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진정한 좌파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우파의 반사이익 얻기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에게 우리 좌파들은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 노동자 운동이 문재인에게 저항하고 선명하게 비판하면서 정치 지형을 왼쪽으로 기울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인의 인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우파가 챙기지 못한다. ‘반(反)우파를 위해 문재인 측면 지지하기’는 2005년 이후 노무현에 대한 환멸로 진보가 동반 하락했던 약점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은 개혁 후퇴에 직면한 노동자들에게 인내를 요구할 뿐, 복지 확대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이다.

또, 좌파는 노동운동 내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에 관해 명확한 좌파적·계급적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과는 물론이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방어해야 한다. 민간부문 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공격이 성공하면, 계급 간 세력관계(힘의 균형)가 불리해져서, 더 엄격한 조건의 노동자들도 공격받기가 더 쉬워진다. 좌파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밖에도 구조조정의 대안, 직무급제, 연대임금 등의 쟁점도 중요하다.

좌파들은 자신들이 제안하는 전술이 온건한 지도자들의 자기 제한적 전술보다 운동을 더욱 키우고 성과를 거두는 데 효과적임을 대증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그러려면 급진 조합주의의 협소함을 벗어나 사업장이나 부문 내 노사 세력관계뿐 아니라 더 넓은 정치 상황을 알고 (가능하면)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온건한 노조 지도자들을 그저 폭로하고 일축해 버리는 것은 전술로서 크게 부족함을 이해하고, 노조 지도부에 촉구하거나 좌파 지도부와의 간헐적인 사안별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노동운동이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전위와 후위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

이 있다. 개혁주의적 노조 지도자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조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바람직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심지어 사용자와) 참여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런 약점은 올해 노동운동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온건한 노조 지도자들은 민주노총이 이바지해야 할 한국 사회 개혁 과제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와 일부 겹친다면 이를 위한 ‘광범한’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급을 초월한 국민적 연합은 노동계급의 독자적 투쟁을 어느 수준 이하로 억압하고, 어느 수준을 넘을 듯하면 노동운동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또, ‘정규직 양보를 통한 격차 해소’론이 노동운동 내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것도 약점이다. 노동운동은 온건파뿐 아니라 일부 좌파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방어 노력은 광범한 지지를 받기 어렵고, 노동계급 내 격차만 증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상위그룹인 민주노총”은 노동조건을 지키려는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금 공격,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일자리 연대’, ‘연대임금’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이런 입장은 노동자들의 투지를 떨어뜨리고 수동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 있다. 개혁주의적 노조 지도자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조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바람직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심지어 사용자와) 참여와 협력을 추진한다.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노동자 후보의 승리를 위해

김인식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에 자유한국당(강기윤), 민주당(권민호), 정의당(여영국), 민중당(손석형)이 출사표를 던졌다.

우리는 진보 염원 대중과 함께 이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보수 후보에 이기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우파 정당의 꾀대를 한 방 같기고 싶다.

이 선거구의 진보 후보들은 모두 노동자 정당들(정의당, 민중당)의 후보다. 창원은 중요한 노동자 도시이고, 2000년 이후 울산과 함께 노동자 진보 정치의 상징이 돼 온 곳이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업 CEO 출신 후보이다. 민주당 후보는 새누리당 거제시장 출신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부상한 대중의 반우파 정서 덕분에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 최근 창원 KBS 여론조사에서는 강기윤과 여영국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25퍼센트대). 권민호와 손석형 후보는 7퍼센트대다.*

노동자들 사이에 여전히 강한 반우파 정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정서가 최근 전국 선거들에서(진보정당들 중) 선거적 우위를 보여 온 정의당으로 쏠렸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선거구였다 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민중당 후보들이 자유한국당 후보를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당연히 진보 정당 후보들의 단일화 문제가 제기된다.

정의당·민중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우파 후보를 패퇴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2016년 총선 때도 노회찬 후보와 손석형 후보가 예비 경선 과정을 거쳐 후보를 단일화했다.) 반대로, 두 진보 정당 후보들이 각각 출마하면 승리 가능성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줄어들 것이다.

물론 정의당과 민중당 둘 다 창원 성산구에 실질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 온 출마를 접는 것은 몹시 쓰라린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두 정당은 우파의 회복을 막으라는 노동계급의 대의에 부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진보 정당이 각각 출마해 단일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우파 후보(그때도 한나라당 후보는 강기윤이었다)가 어부지리를 얻은 2008년 총선을 기억해야 한다.

* 창원KBS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조사 일시: 2/15~2/17.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현재 정의당과 민중당은 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을 후보 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한 쟁점이다. 민주당 후보 권민호가 ‘3자 원샷 단일화’를 정의당과 민중당에 제안했다. “범민주개혁진영의 승리로 촛불혁명 부정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하지만 권민호는 전 거제시장 출신으로, 박근혜가 탄핵당한 직후인 2017년 4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부패한 기회주의자다. 민주당 지도부나 그 후보나 모두 진보적 개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대중의 불신과 불만이 급증한 상황이다.

단일화 방식

이런 점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 측이 권민호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민주당이 진보 개혁을 위한 동맹이라도 되는 양 분장시키는 나쁜 정치적 메시지를 준다.

정의당은 민주당을 후보 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 측은 권민호의 제안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라는 단서가 달린 게 불길한 느낌을 준다.

지금 정의당과 민중당 사이의 최대 쟁점은 단일화 경선 규칙이다. 정의당은 애초 여론조사 100퍼센트를 제안하다가 최근에 여론조사 50퍼센트, 민주노총 조합원 50퍼센트로 수정 제안했다. 민중당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민중당은 애초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주장하다 최근에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민중경선 방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사실, 선출(election)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선정(selection)도 후보 단일화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달 동안 각자 선거운동을 해 온 데다, 두 당 사이에 신뢰도 충분치 않아 협상에 의한 선정은 어려워 보인다.

예비경선이 이뤄진다면 대우조선 매각이 최대 이슈가 될 것 같다. 창원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대우조선 매각(이 미칠 파장) 문제다.(물론 대우조선 매각은 지역 현안이 아니라 중요한 전국적 정치 쟁점이다.) 정의당 측(추혜선 의원)은 매각 절차가 “일방적”이라는 문제점을 강조하다 보니 매각반대가 선명치 않다. 반면, 민중당 손석형 후보 측은 매각 계획 철회를 주장한다.

누가 최종 단일후보가 되든 간에 후보 단일화는 결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같은 소망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양효영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을 20대 여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정책기획위가 작성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다.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로 부상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친여성정책을 펼치면서 20대 남성은 역차별과 박탈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해화역 규탄 시위 이후 급하락 추세로 반전”됐다고 지적한다.

20대 여성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싸잡아 비하한 것도 문제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친여성정책’을 펼쳤다는 건 더욱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폐지, 최저임금 개악, 보육 지원 등 어느 모로 보나 진정한 친여성 정책을 펼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청년 여성들이 정부 보고서에 분개하고 규탄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정부 보고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친여성 정책을 폈다면 왜 20대 여성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에까지 나섰으며, 만약 그 이유가 “집단이기주의”라면 왜 청년 여성들이 또래 남성보다 문재인을 더 지지한다는 것인지 도통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다른 모순된 주장을 한다. 20대 남성이 “사회적 배려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등 여전히 문재인 지지율 하락을 20대 남성의 낮은 의식 탓으로도 돌리는 것이다.

최근 설훈, 홍익표 등 여권의 중진 의원들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는 남 탓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우파 정부 하의 교육 탓을 했지만, 결국 잘못된 교육을 받아 20대의 의식 수준이 낮은 게 문제라는 것이니 말이다.

20대 청년의 낮은 의식을 탓하는 건 지배계급 정당들의 고전적인 수법이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하고 이명박이 당선하자 민주당을 비롯해 진보진영 일각까지도 20대가 ‘보수화’됐다고 비난했던 것도 한 사례다. 우파는 비슷한 처지일 때 전교조 탓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고전적 수법에다 ‘남 대 여’ 프레임에 버무려 이간질을 강화하며 자신들의 진정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남 대 여’ 갈등 구도 위에 처음엔 20대 남성들의 ‘배려심’ 부족 탓으로, 이제는 20대 여성들의 ‘이기주의’ 탓으로 돌린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결론적으로 20대 남녀 모두를 탓한다는 점이다. 20대 전체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사실을 교묘한 분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모양이다.

〈노동자 연대〉신문이 지적해 왔듯이, 문재인 지지율 하락을 젠더 갈등 탓으로 돌리는 건 근거가 빈약하다.



문재인은 20대 여성 남성 모두를 만족시킨 적도, 만족시킬 의지도 없다

그동안 20대 여성과 남성은 거의 유사한 지지율 등락을 보여 왔다. 젠더 문제가 핵심이라면 성별에 따라 지지율 등락이 상반돼야 할 텐데 말이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지지율은 20대 남녀 모두에서 10퍼센트씩 하락했다(갤럽 2월 3주차 조사).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보수 언론들도 이런 ‘남 대 여’ 프레임을 가져다가 20대 남성을 비난해 왔다. 그런데 같은 프레임을 고스란히 20대 여성을 비난하는데 쓰자, 이전 급진적 페미니스트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보고서의 모순은 ‘남 대 여’, 즉 젠더 갈등 프레임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남녀 어디를 비난할 때나 다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젠더 프레임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여전히 그들 스스로 ‘남 대 여’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일조해 온 책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현 사회가 남성이 여성을 위계적으로 지배하는 체제(가부장제의 다른 이름인 여성혐오 사회)라는 관점 속에서 남성 거의 전부를 편견쟁이나 여성 차별의 수혜자로 바라봐 왔다.

문재인 정부 각료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배출한 여성단체연합 역시 이러한 급진적 페미니즘을 공유해 왔다. 여성단체연합은 이번 보고서를 “왜곡된 내용”이라고 비판하지만 자신들이 그런 ‘남 대 여’ 프레임을 제공해 왔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왔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녹색당은 정부 보고서를 “기득권 남성 권력의 백래시”라 규정했다. 노동당도 “20대 남성 지지율만 신경 쓰는 남성우월주의”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문재인에 배신을 또다시 남성 일반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평범한 남성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남성 일반이 기득권이라며 비난하는 건 반발을 낳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에 대한 실망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재인과 동일시

돼 온 페미니즘과 차별화되지 않으면 일부 청년들은 우파들 쪽으로 이끌릴 수도 있다.

우파 언론과 정당들도 ‘남 대 여’ 갈등 프레임을 이용해 문재인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자신들 쪽으로 이전인 수하려 애쓰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워마드를 비난하면서 남성 청년을 대변하는 척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지배계급이 위선적으로 젠더 갈등 프레임을 강화해서 남녀 이간질을 하는 것이 계급 문제를 은폐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취업, 주거, 정치에 공통된 불만을 가진 청년들을 단결된 저항으로 이끌기보다 서로간의 갈등과 분열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 연대〉신문은 ‘남 대 여’ 프레임을 거부하고 대신에 계급 프레임을 고수해 왔다.

진보개혁 배신으로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문제가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는 핵심 이유다. 언제나 그렇듯, 정치적 경험이 적은 20대가 기대가 더 컸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이탈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여성 인권 치중/성갈등”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1퍼센트밖에 안 됐다. 20대 남성이 문재인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은 고용노동 정책 부분이었다(부정평가 72퍼센트). 20대 여성 절반도 같은 의견이었다.(갤럽 2월 4주차)

같은 조사에서 압도 다수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40퍼센트)을 문재인 부정 평가 이유로 꼽았다. 물론 문항이 모호해서 이 항목엔 좌우 모두의 불만이 섞여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고 조직도 거의 돼 있지 않은 20대들은 진보·좌파가 부진할 때 우파로 끌릴 수도 있다. 진정한 위험은 여기에 있다.

진보·좌파는 문재인에 촛불 배신을 분명히 비판하면서 왼쪽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은 여성과 남성이 좌파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5.18 망언 규제 논쟁

국가에 혐오 표현 규제를 요구해야 하나?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자한당이 표현의 자유를 들먹였다.

자한당 의원 박성중은 이렇게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면 특정 이데올로기적 사상이 지배해 버리고 결국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원내대표 나경원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는 가당찮은 말을 했다.

망언자들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마땅한데도, 자한당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이 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자한당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5.18 광주민중항쟁은 (자한당의 뿌리인)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의 정치적 이권을 짓밟고자 광주 시민들을 대량 학살하기까지 한 사건이다. 항쟁을 옹호할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다.

자한당 전신 정당들의 정부들이 폭력·탄압·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특히, 자한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하게 반대한다. 학교에서 성소수자 교육을 하는 것도 맹렬하게 반대하고 억압한다.

물론 자한당 의원들은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이들과 그 지식인 친구들은 날마다 방송에 출연해 역겨운 말들을 내뱉는다.

본디 표현의 자유는 권력자들을 위해 인정된 권리가 아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미 아주 큰 소리를 낸다. 미디어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권력자들은 자기 의견을 개진할 일상적 연단이 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권리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문제는 맥락이 중요하다. 권력자에게 저항하는 것과 차별받는 사람들을 표적 삼아 공격하는 것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프랑스의 〈샤를리 에브도〉신문은 이슬람교의 예언자



2월 16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 망언 규탄 집회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만평을 실으면서 언론(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샤를리 에브도〉가 한 일은 이미 가혹하게 억압 받고 차별 받는 무슬림 이민자들(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노동계급 소속인)의 믿음을 조롱해 그들을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무슬림과 이민자 차별을 더 쉽게 하고, 이슬람 혐오를 더 광범하게 유포시켰다. 또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중동 개입을 정당화하고, 인종차별주의를 촉진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것은 무엇이트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 본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누구나 인정한다. 가령 〈조선일보〉조차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아동 포르노를 신지는 않는다.

5.18 망언자들이 북한군 광주 침투설, 광주교도소 습격설, 5.18 유공자 귀족 예우설을 쏟아 내는 것도 괴악압 대중으로서의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가 없다. 특히, 오늘날 대중의 민주주의 염원을 송두리채 부정하고픈 그들의 반동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망언자들은 편견과

차별과 배제 등을 강화해 천대받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염원을 공격하고 싶어 한다.

유럽은 어떤가?

광주항쟁에서 자식 등을 잃고 억장이 무너진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5.18 망언은 인격 살인 행위일 것이다. 5.18 망언만이라. 세월호 유가족들, 무슬림 예민 난민, 성소수자 등도 혐오 발언의 대상이었다.

우파 정치인들의 망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문재인은 이렇게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도 이 사태에서 떳떳하지 못하다.

지난번 민주당 정부들이 광주 학살의 원흉들에게 유화적이고 관대한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당선되자마자 전두환·노태우를 석방하고, 노무현은 두 번이나 전두환·노태우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런 관용을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적잖은 사람들이 혐오 표현을 법으로 금지(규제)하라고 주장한다. 진보 정당인 민

중당도 최근에 그런 입장을 밝혔다. 물론 민중당은 훌륭하게도, 망언 직후 신속하게 규탄 행동을 조직하기도 했다.

혐오 표현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유럽의 사례를 든다. 독일과 프랑스에는 역사 부정(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인 죄)이나 소수자 혐오 표현(프랑스의 외국인혐오 처벌법)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과 프랑스는 인종차별적 파시스트들이 위협적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는 나라들이다. 법으로는 파시스트들의 세력 형성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역사적 경험이 이를 말해 준다. 1930년대 초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이 부상하자, 바이마르공화국의 주류 정당들(사회민주당, 자유주의 정당 등)은 모두 나치를 비난하면서도, 대규모 거리 시위와 행진보다는 헌법적 수단을 통해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권력을 잡자마자 비헌법적이게도 이들을 강제수용소에 집어 처넣었다.

한편,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것은 말과 출판을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할 권한을 국가에 더 많이 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좌파와 차별

받는 사람들도 더 쉽게 단속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파시스트들을 공적 공간에서 쫓아내기 위해 법으로 규제하라고 국가에 요구하지 않는다. 우파 정치인의 혐오 표현에 맞서기 위한 가장 좋은 대응은 대중에게 권능(힘)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영국의 혁명적 좌파는 파시스트(나치)에 대해 ‘노 플랫폼’(발언 기회 주지 않기) 전술을 구사한다. ‘노 플랫폼’은 파시스트가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발언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방침이다. 파시스트들은 노동계급의 권리와 의회제 민주주의를 전부 파괴하는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대중 시위, 맞불 집회 등 힘의 과시를 통해 정치 공론의 장에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노 플랫폼’은 파시스트들의 성장을 막는 데서 효과를 입증한 특수한 전술이다. 가령 영국 좌파 대학생 단체들은 ‘노 플랫폼’ 정책을 통해 나치가 대학 캠퍼스에서 조직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파시스트가 아니고 단지 반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노 플랫폼’ 전술들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국가가 검열하라는 요구는 더더욱 안 된다. 사람들의 보수적 생각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함께 투쟁하면서 그 속에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금지나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대중 행동을 통해 우파 정치인들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행동은 사람들이 더한층 정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표현인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한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중이 권력자들에게 맞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인식

“가짜 정규직화(자회사) 거부한다”

직접고용 투쟁 중인 한전 고객센터 노동자들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 사업장이지만, 한전 사측은 자회사 전환만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력노조 한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2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집중 집회와 청와대 행진을 벌였다.

2월 28일, 교섭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노조 지도부가 공개채용 수용까지 양보했지만, 사측은 또다시 “회사 정책상 직접고용은 절대 불가”

라며 기존의 자회사 전환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조합은 3월 4일 성명서를 발표해 사측을 강하게 규탄했다.

“알아서 잘되게 해 준다”기에 1년을 기다려 온 우리를 기만하고, 이토록 일방적인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한전의 방식인가? 왜 자회사는 되고 직접고용은 안 된다는 것인가?”(성명서 중)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원래 한전 고객센터 업무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수행했다. 그런데 2006년 고객센터가 외주화되면서 용역 노동자가 됐다.

하지만 외주화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기존 한전 직원들과 동일 업무를 해 왔다. 정규직 직원들과 업무 연결성도 여전히 높다.

예컨대, 똑같은 업무이지만 상황에 따라 한전 정규직 직원이 하거나 고객센터 비정규직이 하는 일도 있다. 전기요금 환불 접수 업무는 오후 4시 30분까지 고객센터 비정규직이 처리하고, 그 이후에는 한전 정규직 직원이 한다.

고객이 전화로 요청하면 고객센터가 처리하지만, 방문해서 요청하면 한전 직원이 처리하는 업무도 있다.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긴밀히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과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협업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조합의 말대로 “동일한 업무를 역지로 나누고 있던 구조”인 것이다.

사측은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간접고용을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도 고객센터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개입했다.

2018년 12월, 사측이 한전 측과 고객센터가 메신저를 직접 주고받지 못하게 지시한 것은 그간의 불법파견 행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객센터노조는 한전 정규직 직원들을 조직하고 있는 전력노조의 지지를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다. 고객센터노조가 수개월째 투쟁하고 있는데도 전력노조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껏 함께해 온 동료 조합원이고 동지라고 불렀던 사람들이다. 우리의 최대 숙원인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어려운 길에 전력노조 동지들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성명서 중)

한국전력은 자회사 방안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고용해야 한다.

양효영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창립 100주년 세계 혁명의 등대 코민테른

9로 끝나는 해에는 유의미한 역사적 사건들이 많았다. 1919년 3월 2일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 창립도 그중 하나다. 훗날 스탈린에 의해 완전히 망가지지만, 한때 코민테른은 혁명적 전략·전술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였다. 이 글은 코민테른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오늘날 국제 사회주의자들이 도출해야 할 더없이 소중한 교훈들을 소개한다.

국수주의자들이 벌인 제1차세계대전
의 대학살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지 않
다며 절망했다. 그러나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
어나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았다. 러시아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었
던 것은 분명한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 즉 볼셰비키가 있었기 때문이었
다. 볼셰비키에게 사회주의는 위로부터
선사되는 무엇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었다. 볼셰비키는 자본주의 국가가 분쇄
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기 때문에 국
제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에 맞서야 한
다고 주장했다.

1919년에 볼셰비키는 ‘공산주의 인
터내셔널’(코민테른)을 설립했다. 코민
테른의 목적은 전세계 최상의 투사들
이 협력해 러시아와 같은 승리를 가능
케 할 정당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1919년 3월에 코민테른 첫 번째 대
회가 열렸다. 35명의 대표가 참여했지
만 그 중 러시아인 다섯 명만이 진정으
로 대중적인 혁명 정당을 대표했다. 대
중적인 혁명 정당을 창출한다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닐 터였지만, 그럼에
도 코민테른은 혁명 전략과 전술을 배
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가 됐다. 코민테른에서의 논쟁은 노동계급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혁명 정당을 건설
하는 문제에 방점을 뒀다. 코민테른은 혁명가들이 억압 문제
를 어떻게 다뤄야 하고 노동조합이나
민족 해방 투쟁과 어떻게 관련 맺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논의했다. 러시아 혁명가들은 다른 [나라] 혁명
가들의 경험에서 배웠다. 제3차 대회에 참가한 인도 대표 M
N 로이는 이렇게 기록했다. “유색 인
종 사람들이 고압적인 제국주의자들
이 아닌 친구이자 동지로서 백인을 만
난 것은 처음이었다.” 코민테른은 좌파 단체들에게 거창
한 이름을 붙여 주려고 설립된 것이 아
니었다. 코민테른은, 혁명적 위기로 대중적
공산당이 등장해 [노동계급의] 국가 권
력 장악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거라는 전망 속에서 결성됐던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전망이었다. 제1차
대회가 열린 바로 그 해에, 헝가리와
[독일의] 바이에른에서 소비에트 공화
국이 잠깐이나마 권력을 잡았다. 또한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가 이탈리아 전
역으로 확산됐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와 아일랜드



레닌, 지노비예프, 부하린 등이 참석한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세계 대회

벨파스트에서 거대한 파업이 벌어졌
으며, 영국과 프랑스에서 군대가 반란
을 일으켰다. 1920년 3월 독일에서는
우파의 쿠데타 시도를 노동자 총파업
으로 분쇄했다. 노동자들이 코민테른 소속 정당들
로 몰려들었다. 1920년에 열린 코민
테른 제2차 세계 대회에는 40개 나라
67개 단체에서 파견된 대표 217명이
참가했다. 신생 소비에트 러시아 혼자서는 [세
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
었다. 독일이 핵심이었다. 제1차세계대전 마지막 몇 개월 동안
혁명이 독일을 휩쓸었다. [애초에는] 제1차세계대전을 지지했
던 독일사민당원들이 갓 만들어진 노
동자·병사 평의회를 주도했다. [사회민주당이 포함된] 신생 좌파 정
부는 공화국 수립을 선언하고 군대 폐
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자 평의회
를 없애려고도 했다. 독일에 혁명을 위한 조건이 없지 않
았다. 그러나 그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급에 뿌리 내린 혁명적 지
도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중적인 개혁주의 조직들의 성장
은 코민테른이 다뤄야 하는 가장 중요
한 문제가 됐다.

국가 기구

개혁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폐지하
려면 국가와 의회 같은 자본주의 국가
기구를 재건하고 나서 위로부터 변화
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고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당원 던컨 핼러스는 코민테른을
다룬 탁월한 글에서 사회민주주의 정
당들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 “입으로
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를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사실상 당원

과 득표를 늘리는 것으로 제한됐다. “국가 권력, 심지어 사용자들과의 대
립도 할 수만 있다면 회피했다.” 유럽에서 반란이 커지자 중간주의
정당들도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 대표
를 파견했다. 1920년에 레닌이 썼듯이, “‘공산주
의 인터내셔널’이 어느 정도 유행이 되
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과 논
쟁을 회피하지 않고 개혁과 혁명 사이
에서 진정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설
득하려 했다.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왼쪽에서 공
산주의자들을 비난하려 했다. 이들은
급진적 수사를 동원해 자본주의와 화
해를 추구하는 자신들의 전략을 감추
고자 했다. 논쟁은 직설적이고 격렬했지만 생
산적이었다. 코민테른은 [개혁주의자
들과의]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 엄격
한 가입 규정을 마련했다. 코민테른은 가맹 조직들이 민주적
중앙집중주의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적 중앙집중주의는 결
정 전까지는 당내 민주주의를 고수하
지만 결정 사항을 실행할 때는 행동 통
일을 요구한다는 의미였다. 이것은 [결정에] 책임지지 않는 개혁
주의 지도자들과 결별하는 하나의 방
법이었다. 더불어 정치 정당들을 신뢰
하지 않는 혁명적 노동조합원들에게
다가가려는 것이기도 했다. 1921년쯤 자본주의는 제1차세계대
전 직후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
고 있었다. 혁명가들은 새로운 전술을
개발해야 했다. 1922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이
렇게 호소했다. “프롤레타리아의 긴급
하고 당면한 요구를 위한 공동 투쟁을
벌이고자 한다면, 서로를 갈라 놓은 차

이점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지지를 받는 모든 정당들이 공동 전선
을 구축[해야 한다.]” 투쟁을 벌인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
었다. 개혁주의 혁명가들은 개혁주의와 단절해 왔
다. [그래서] 개혁주의 노동자·조직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언제나 쉬
운 일이거나 환영받을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레닌이 말했듯, 혁명가들이
그런 일을 잘하지 못한다면 “자본가 계
급의 노동 부관들”에게 노동자들을 내
맡기는 일이 될 것이었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공
산주의자들이 “파업 파괴자 구실을 하
는 지도자들과 협상할 태세가 돼 있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노동자들을 혁
명적 사상과 조직으로 획득하는 것이
었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 정치야말로
노동자들을 이끌 최상의 투사들을 만
들어 낸다는 것을 투쟁 속에서 입증해
야 했다. 실질적 요구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단결의 필요성이 커지고, 노
동계급의 자신감은 고양될 것이었다. ‘공동전선’으로 알려지게 된 이 전술
은 모든 혁명 정당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순에서 출발했다. 혁명 정당은 노동계급 중 소수를 대
표했다. 그러나 동시에 다수의 적극적
인 참여가 없다면 노동계급은 권력을
장악할 수 없었다. 그 간극을 메울 방법이 필요했다. 그
러려면 혁명 정당은 개혁주의 정당들
과 혁명가들이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구
체적 쟁점을 제시해야 했다. 개혁주의 정당의 기층 노동자들뿐
아니라 그 지도자들에게도 [함께 투쟁

할 것을] 호소해야 했다. 그러나 노동
자들을 혁명적 정치 쪽으로 획득하고
자 한다면 혁명 정당은 반드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했다. 이 전술은 1922~1923년 독일 노동
운동에 대한 [극우와 파시스트들의] 공
격을 방어하는 데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1923년, 독일 혁명에 (또한 코민테
른에도) 전환점이 찾아왔다. 프랑스 군
대가 루르 지방을 점령했으며, 물가는
치솟고 나라는 좌우로 양극화됐다. 국가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커졌다. 독일 공산당은 두 주[작센과 튀링기
아]에서 사회민주당과 연합하고 있던
“노동자 정부”가 소위 혁명적 봉기를
벌이도록 밀어붙였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이 소심하게
꼬리를 내리자 공산주의자들도 그들
을 따랐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봉기
를] 지지했는데도 말이다. 1925년에 레닌이 사망했다. 혁명이
쇠퇴하면서, 애초에는 코민테른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스탈린이 자신의
영향력을 늘려 나갔다. 미국의 혁명가 제임스 P 캐논은 스
탈린의 유혈낭자한 반혁명이 낳은 결
과를 서술했다. 그는 “[코민테른에 속한 각국 공산당
들이] 혁명 조직에서, 소련의 국경 수
비대이자 소련의 외교 정책을 지원하
는 압력 단체”로 바뀌었다고 썼다. 1920년대 중반에 러시아의 지도자
들은 공산당들을 우파와 연합하는 쪽
으로 이끌었다.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이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과 연합하게 했는데, 그
방침의 결과로 수많은 공산당원들이
학살당했다. 그러자 스탈린은 개혁주의 정당을
‘사회파시스트’라고 비난하며 개혁주
의 정당과 일절 협력하지 말라고 명령
했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이는
결코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
에 [스탈린이 지도한 코민테른은] 또다
시 갈지자결음을 걸었다. 스탈린은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계급
과 동맹하려 애쓰면서, 각국 공산당들
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했다. 곧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서 혁
명 운동이 가로막히고 결국 패배했다. 초기 코민테른의 실수는 혁명 정당
들의 미숙함에서 비롯됐다. 혁명을 이끌긴 했지만 개혁주의 대
중 정당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었던 러
시아의 혁명가들이 필요 이상으로 코
민테른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후에 겪은 재앙은 코민테른이 설
립 당시의 원칙을 완전히 저버린 결과
였다. 코민테른의 경험은 우리에게 노동
계급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계
급에 뿌리 내린 혁명 정당이 왜 필요한
지 보여 준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353호 / 번역 전문가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과 남성 노동자가 단결해
성차별과 노동개악에 맞서자

정진희

지난 1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7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3.2퍼센트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임금격차 통계 발표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해 온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중도 여전히 높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이 35퍼센트로 2017년 통계가 있는 8개국 중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OECD의 저임금 기준은 노동자 중 위 임금의 3분의 2를 못 받는 경우다.

문재인 정부는 높은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저임금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채용 성차별 대책도 실종 상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양육 지원 등에 대해서도 별로 다르지 않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공공보육시설 부족, 주택난이 여전히 심각하다. 그래서 노동계급 여성들이 직장과 집에서 시달리는 이중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도대체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절실한 요구들은 뭐 하나 진척된 게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성평등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이 말뿐이었음이 지난해 많은 여성들에게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긴축 정책과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며 노동계급 여성들과 그 가족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다. 거둬든 최저임금 개악으로 여성 노동자 다수의 임금이 삭감됐다. 그 밖에도 기업들이 해고,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등을 마음껏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복지 예산을 쪼끔 늘리고는 공공요금을 인상했고 국민연금 개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 실현은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노동·생활 조건의 개선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저임금 해소, 양질의 일자리, 동일노동 동일(가치)임금, 공공보육시설·공공임대주택·공공병원 대폭 확충 등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이윤 논리에 투철한 정부·기업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로는 이런 조치들을 도입할 수 없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일각에 있는 그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지배계급의 노동계급 이간질에 이용될 뿐이다.

지배계급은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자 여성과 남성을 더욱 이간질하려 할 것이다. 노동개악과 성차별에 맞선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의 단결된 투쟁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세계 여성의 날'의 전통

세계 여성의 날은 독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클라라 체트킨이 1910년 제2인터내셔널 국제노동여성회의에서 제안해 1911년부터 기념되기 시작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여성 방직 노동자 1만 5천 명이 벌인 행진을 기념하며 노동계급 여성들의 투쟁을 고무하려는 것이었다.

미국 사회당은 뉴욕의 여성 노동자 투쟁에 자극 받아 1909년 2월 28일에 첫 번째 '전국 여성의 날'을 선언했다. 그 해 11월, 뉴욕의 여성 방직 노동자 2만 명이 13주 동안 파업을 벌여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이 파업은 미국 여성 노동자 조직화에서 전환점이 됐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에 일어난 파업과 시위가 차르를 무너뜨린 2월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10월 혁명 승리 뒤 노동자 정부는 세계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하고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 등 급진적인 여성해방 조치들을 도입했다.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래 여성 노동자들은 크고 작은 투쟁을 벌여 왔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대하면서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여성들의 잠재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이후 노동자 운동이 전진하는 가운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는 조직 노동계급뿐 아니라 미조직 노동계급 여성들이 대거 참가한 투쟁도 일어났다. 한국 여성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운동이었던 불법촬영의 운동 참가자의 다수가 젊은 노동계급 여성들이었다. 미투, 낙태권 운동도 노동계급 여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오늘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해마다 민주노총이 개최해 온 여성노동자대회를 올해 처음 전국노동자대회로 치른다. 남녀 조합원 모두의 참가를 독려하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고용 과정에서의 모든 성차별 해소,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직장 내 성희롱 반대, 여성 노동자 조직화 확대 등의 요구를 내걸었다.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세와 이간질에 맞서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이런 방침은 옳다.

좌파는 노동자 운동이 차별받는 여성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착취와 차별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지난해 첫 파업을 벌여 승리를 거둔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

낙태, 왜 노동계급의 쟁점인가?

4월 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판결을 앞두고 낙태 합법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3월 9일(토) 비웨이브 주최의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다. 3월 30일(토)에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의 집회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개최된다.

낙태권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쟁점이다. 낙태가 불법화된 나라뿐 아니라 스페인, 미국 등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여성들이 낙태권 후퇴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낙태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일 뿐 아니라 계급적 쟁점이기도 하다. 예나 지금이나 낙태가 불법인 상황은 부유한 여성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낙태가 합법화된 해외에 나가 시술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태 불법화는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

높은 낙태 비용이 대표적이다. 최근 <여성신문>이 병원 7곳에 문의한 낙태 수술 비용은 임신 7주의 경우 80만~100만 원 수준이었다. 임신 13주에

는 100만~180만 원으로 뛰었다. 이런 비용은 낙태를 원하는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실로 막대한 부담이 된다.

낙태 불법화로 여성 노동자들은 낙태 후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일터에 나가야 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몸이 축날 수밖에 없게 된다.

여성의 요청에 따른 낙태 합법화가 필요하다. 사유와 기간 제한, 상담 의무화 등의 제한 없이 여성의 낙태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낙태 수술은 의료보험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돼야 하고 낙태약도 마찬가지다.

낙태죄를 없애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받으려면 낙태권 운동이 앞으로 크게 성장해야 한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지난해 국민투표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가 합법화됐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이 거둔 성과다. 여성 임금 노동자 증가, 사제 성추문 등 가톨릭의 위신 추락, 대중 의식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대거 동참한 낙태권 운동이 수년간 일어났다. '이윤보다 인간'을 소속 아일랜드 사회주의자들의 주도력이 핵심적 구실을 했다.

한국에서도 낙태권 운동은 노동계

급의 여성과 남성이 대거 동참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럴 때 낙태 합법화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함께 참가합시다!

19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일시: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장소: 서울 보신각 앞(종각역 4번 출구)

주최: 비웨이브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베네수엘라:
미국과 친서방 우파가
계속 옥죄고 있다

★ 인도·파키스탄 분쟁:
푸리에는 영국 제국주의의
유산이 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노동당의 한계에 맞닥뜨린 코빈

★ 국가인권위,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하다

함께 참가합시다!

2019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3월 8일(금) 오후 2시

장소: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

주최: 민주노총





대우조선 매각 반대, 민영화 반대!

영구 공기업을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박설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몇 차례 4시간 파업을 하고, 수천 명이 항의 집회를 하고, 지역 도심을 행진하며 민주당 지지체를 압박하고, 상경 투쟁을 하는 등 분노와 투지를 키워 왔다. 노조는 곧 있을 본계약 체결과 기업 실사를 앞두고 하루 파업과 집회를 이어 갈 계획이다.

물론, 예고된 3월 8일에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각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독과점 여부를 따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해외 경쟁국들의 기업결합심사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세계 1·2위 기업의 합병을 견제하는 경쟁국들의 심사가매각 추진에 난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투쟁을 확대해, 적어도 그 전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을 민영화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 수주가 약간 늘어난 상황을 이용해 대우조선을 민간 대자본(현대중공업)에 팔아 치우는 것이 기업을 정상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면, 기업주들에게는 이득이 되겠지만 노동자들은 해고와 임금·조건 하락 등 끔찍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 설파하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주장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가? 일자리를 지킬 효과적인 대안은 정부가 대우조선을 영구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공기업을화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대우조선처럼 매각을 위한 임시관리 체제와는 다르다.

대우조선은 이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인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온전한 공기업이 아니라, 매각을 위한 ‘일시 공기업화’ 상태다. 채권단과 기업의 수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게 그 목적이다.

정부에게 책임 묻기

따라서 ‘일시 공기업화’ 상태를 영구 공기업으로 전환해, 정부가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 1997년 IMF 경제 공황 때도,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도 역대 정부들은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막

대한 자금을 대 왔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부실 기업의 파산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3조 원이 넘는다.

정부는 수십만 개 일자리를 지키는데 이런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부를 압박해 대중의 필요를 강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다.

둘째, 정부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던 것에서 보듯, 정부는 경제 위기 하에서 자국민의 고용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무려 20년간 사실상 정부가 소유·운영해 온 공공 자산을 민영화하는 것은 이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조선산업의 위기를 부르고 분식회계 등 비리를 방치한 책임도 있다. 대우조선이 막대한 적자를 부른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들 것, 분식회계 관리를 하지 못한 것도 정부 책임이다.

진보진영 내 일부는 ‘부실·비리 기업의 매각을 반대만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책임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와 사측이 져야 한다. 더구나 현대중공업에서도 뇌물수수·납품비리 등의 문제가 거듭 불거졌던 것을 보면, 민영화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공기업을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은 부실·비리를 낳은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다.

자신감

넷째, 물론 공기업을화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의 공기업들도 노동자들의 조건을 끊임없이 압박한다. 공기업들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료적·위계적으로 조직된다. 따라서 단지 국가 소유를 넘어 노동자 통제가 결합돼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기업을화 요구가 쓸모 없거나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대우조선 매각을 막고 영구 공기업을화를 쟁취한다면, 당면 일자리 위기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 되면 경제 위기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있음을 보여 주고 싸울 자신감을 줄 것이다. 또, 시장의 이윤 논리에 타격을 가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투쟁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대안을 쟁취하려면 단호한 투쟁과 연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지배자들은 대우조선이 영구적으로 공기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므로, 대중 운동의 압력이 조직돼야 한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면, 공장 점거는 매각-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조건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 전술이었다. 그런 투쟁에 광범한 연대가 더해지면, 일자리를 지키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20년간 정부가 소유·운영한 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이다

노동운동 내에서 제기되는 부적절한 대안들

• 고용을 지키는 “바람직한” 매각?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1+1이 2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현대차-기아차가 합칠 때처럼 고용을 지키고 노조를 지킬 수 있다.”

정부의 ‘일방적·졸속적 매각 추진’을 반대하며, 금속노조 위원장이 한 말이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고용 친화적 매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나 여영국 창원 성산구 후보의 “산업과 노동자 살리는 구조조정”도 이와 유사하다. 특히, 매각 절차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일방적·졸속적” 매각에 반대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손석형 민중당 창

원 성산구 후보는 매각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 하에서 기업 매각은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자 희생을 동반한다. 더구나 기업이 위기에 빠져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법정관리를 했다가 매각하는 경우, 사실상 공기업을이윤에 눈먼 민간자본에 팔아 넘기는 민영화다. 돈 되는 장사, 최대한의 비용 절감이 매각 협상을 좌우하는 최우선 논리가 될 게 뻔하다. 노조가 매각 협상에 참여하더라도 양보 압박만 받기 십상일 것이다.

‘1999년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때는 다르지 않았나? 현

대중공업이 삼호중공업을 인수한 2002년도 다르지 않았나?’ 하는 물음 이 있다.

그러나 당시와 지금은 경제 상황, 해당 부문의 업황이 다르다. 1999년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너도나도 몸집을 키우며 생산량을 늘리던 호황기였고, 2002년은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전 세계 물동량이 크게 늘면서 한국 조선업이 한창 성장세를 구가하던 시기였다.

반면, 지금은 조선업 수주가 늘었지만, 아직 크게 회복하지 못했고 세계 경기 악화 속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런 경제 위기 때는 인수합병이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임금·조건 후퇴 등의 고통을 낳을 게 뻔하다. 따라서 고용을 지키는 “바람직한 매각”을 기대할 수 없다.

• “경남공공조선”으로 지역 조선업을 재건하자?

최근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경남공공조선”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그가 모델로 삼은 방안은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는 경남 지역에서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기업·노조 등이 함께 민·관합동(제3섹터)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그 지주회사의 통합 관리하에 대우조선, STX조선, 성동조선 등을 두자는 제안이다.

프랑스 등 유럽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델은 돈벌이에 혈안인 민간 자본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조건도 크게 위협을 받았다.

더구나 이 모델은 노동자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 지역 조선업의 경쟁력

“재건”을 위해 금속노조, 정규직 노조가 임금·조건을 양보하는 대신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끌어 내는 ‘대타협’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기에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이 희생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 위기 구조조정의 고통에서 노동자들을 구하는 데 돈을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자본주의 논리

한편, 금속노조 지도부는 “노동 친화적” 산업정책을 통해 조선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도 조선업 살리기를 주장하지만, 그 기조는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고 나머지는 죽이는

“산업 생태계 파괴”를 낳을 것이라고 금속노조는 비판한다. 금속노조가 제시하는 산업정책은 중소 조선소들과 숙련 노동력을 육성하는 데 강조점이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하는 좋은 의도가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어떤 산업이나 기업의 발전 전망을 찾는 데 주력하다 보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발목이 잡히기 쉽다. 산업·기업이 생존해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자본주의 논리를 수용한다는 약점이 있다. 결국 비용 삭감 논리에 취학해져 노동자들도 일자리와 임금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가 쉽다.

특히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어떤 발전 전략이 성공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 일은 더욱 빈번히 벌어질 수 있다.